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20일 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01면	오색케이블카 착공·K-연어 선포, 양양 새출발	1
江原日報	01면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1
강원도민일보	04면	속초항~러시아 북방항로 10년 만에 열린다	2
江原日報	13면	속초, 북방항로 물류·여객 거점 재도약	2
江原日報	21면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장 나눔의 손길 ‘훈훈’	3
江原日報	03면	감사 나선 교육위	4
중부뉴스통	온라인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 방학...	5
세계타임즈	온라인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 방학...	6
에너지경제		엄기회 도의원 "농어촌 유학제도, 소규모 학교 살릴 효과적 ...	7
스포츠서울	온라인	엄기회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농어촌 유학제도, 소규모 학...	8
G1방송	온라인	김기하 의원, 도교육청 홍보 영상물 업체 선정 지적	9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 김기하 의원 “교육청 홍보영상 업체 선정 ...	10
江原日報	03면	“전자철판 사업 의혹 감사원 조사 예의주시”	11
강원도민일보	03면	'전자철판 업체 특혜 의혹' 도감사위 감사청구 유보	11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12
강원네트워	온라인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13
중부뉴스통	온라인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14
세계타임즈	온라인	조성운 의원,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시 특정 업체 쓸림 의혹’...	15
스포츠서울	온라인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시 특정 ...	16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장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10건	17
KBS 춘천	온라인	강원평경연 “전자철판 사업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17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 출연기관 감사 강화해야” 지적 잇따라	18
강원도민일보	19면	[의정칼럼] 우리 농업의 답은 직불금이다	19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김진하(왼쪽) 양양군수·진종호(양양) 도의원	20
강원도민일보	11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20
강원도민일보	14면	[동정] 최종수(평창) 도의원	20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이병선(위 왼쪽) 속초시장·김시성(속초·위 오른쪽)...	20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오세만(왼쪽) 양양군의회장·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	20
江原日報	01면	민원서류 발급될까... 불안감 여전한 월요일	21
江原日報	01면	휴일에도 출근해 전산망 점검하는 공무원	21
江原日報	02면	'규제 프리'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전 점화	22
강원도민일보	01면	의혹·소송·지연...경제자유구역 '첩첩산중'	22
江原日報	02면	원주혁신도시에 8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23
강원도민일보	02면	60조 세계시장 개척 '강원형 K-연어산업' 닷 올렸다	2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겨울 관광 특수 견인해야	2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정부24' 민원발급 마비 반복없도록	26
江原日報	19면	[사설] 폐광지 위기, 국회의원·지자체 공동 대처로 극복	27
江原日報	19면	[사설] 지역축제, 계절적 한시성 극복해야 경쟁력 생겨	28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01

오색케이블카 착공·K-연어 선포, 양양 새출발

오늘 양양서 각각 착공식·비전선포 강원 산악해양관광·양식산업 본격화

속보=41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20일 양양에서 첫 삽(본지 11월 17일자 2면)을 뜬다. 양양을 중심으로 한 연어산업도 본격화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양양군은 이날 오후 2시 오색사도하부정류장에서 오색케이블카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 착공식 이후엔 양양군 남대천 일원에선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을 연다. 양양군을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악·해양관광과 양식 산업이 본격화

되는 것이다.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김진하 양양군수, 지역주민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오색케이블카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하부정류장(해발 365m)에서 3.3km 떨어진 끝청하단부(1609m)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운영은 2026년으로 예정됐다. 8인승 곤돌라 53대가(초속 4.3m) 1시간 당 800여 명을 실어나르게 된다. 지난달 인허가를 모두 마친 가운데, 업체 선정은 이달부터 조달청을 경유해 진행된다. 최소 100여 일이 걸려

본격 착공은 내년 3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완공 시점은 2025년 말이다.

이와관련, 이 사업은 올해 2월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 8개월 만인 지난달 주요 인허가를 모두 마치며 사업 재추진을 확정했다.

이어 열리는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강원도 K-연어 산업화에 힘을 싣는다. 2025년까지 양양군에 연어 양식 산업단지가 갖춰지면, 강원도와 양양군이 국내 연어 생산·가공·유통 시장의 중심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덕형 >관련기사 2면

江原日報

2023 11 20 ()
01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참석
본공사 시작은 내년 예정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이 20일 오후 2시 열린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양양군민은 물론 강원도민들이 41년간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 오색케이블카 하부정류장 예정부지에서 열리는 착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부처·관계 기관장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이양수 국회의원 등 도 출신 국회의원, 도내 시·군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착공식은 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축사, 테이프커팅식 등으로 진행된다. 착공식과는 별도로 시공사 선정 및 본공사 착공은 내년 2~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지역

대선 1호 공약으로 양양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끝청(해발 1,430m)까지 3.3km를 연결한다. 총 사업비 1,172억원(도비 224억·군비 948억)이 투입되며 2025년 완공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은 19일 '도민의 41년 숙원사업, 오색케이블카 첫 삽을 뜬다'는 논평을 내고 강원도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도당은 "케이블카는 2025년 말까지 준공, 2026년 초부터 상업 운영에 들어간다"며 "사업 추진은 양양군민과 300만 도민의 결집된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폐광지와 접경지에 대한 관심을 더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이끈 석탄산업 퇴진에 따른 허탈감을 극복하고 남북 대치 상황 속 희생을 강요당한 접경지 지원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양=이규호·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04

속초항~러시아 북방항로 10년 만에 열린다

오늘 취항식 지역산업 상생발전

속초항을모항으로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고 가는 북방항로가 10년 만에 정식 취항한다.

속초시는 20일 오전 10시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시승격 60주년 기념 속초항 북방항로 취항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시는 해운선사와 함께 지난 9일, 13일, 16일까지 3차례의 북방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해 선박의 기술적 점검과 기항지 항만 운영점검, 승객 수용태세 점검 등을 통해 항로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북방항로 취항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권혁열 도

의장,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 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내 유관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10년 만의 북방항로 재취항을 축하한다. 이번 북방항로에는 제이에스해운의 1만6000t급, 전장 167m의 카페리인 오리엔탈펠 6호가 투입되며, 약 21시간 가량 운항시간이 소요된다. 주 2차례 운항하며 승객은 700명, 화물은 15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차량 350대를 운송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0년 만에 재취항하는 속초항 북방항로가 지역산업과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주석

江原日報

2023 11 20 ()

13

속초, 북방항로 물류·여객 거점 재도약

속초항~러시아 뱃길 10년 만에 재취항

【속초】속초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고 가는 뱃길인 북방항로가 20일 공식적으로 다시 열린다. 2014년 6월 뉴블루오션호를 마지막으로 항로가 중단된 지 10년 만이다.

속초시는 이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에서 북방항로 취항식을 개최한다. 취항식에는 김진태 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도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김명길 속초시의

장을 비롯해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주민 등이 대거 참석해 북방항로 재취항을 축하한다.

속초시는 오랜 기간 중단된 항로의 재개인 만큼 항로의 조기 안정화와 속초항의 북방물류·여객 거점항만으로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비전 선포식과 축하 세리머니 등을 열 계획이다.

이번에 재취항하는 선박은 제이에스해운의 1만6,000톤급

오늘 취항식·비전선포식
내년 2월까지 도민 할인
시 “산업 상생 발전 강구”

카페리인 오리엔탈펠 6호로 주 2항차 운항할 예정이며, 승객 600명, 화물 20피트 컨테이너 150개, 차량 350대 운송이 가능하다.

북방항로 운항선사인 제이에스해운은 항로 재취항을 기념하고 지역경제 및 주민과의 상생을 기원하는 뜻을 담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강

원도민과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할인운임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안정적인 항로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여객과 화물의 지속적인 창출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10년 만에 재취항하는 속초항 북방항로가 지속 가능한 항로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관련 지역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1 20 ()

21

어려운 이웃에 사랑의 김장 나눔의 손길 '훈훈'

강원대 상상 총학생회
김치담그기 한미당 개최



강원대 제56대 상상 총학생회(회장:최한결)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춘천캠퍼스 함인섭광장에서 '제9회 김치담그기 한미당' 행사를 개최했다.

◇강원대 제56대 상상 총학생회는 지난 17~19일 춘천캠퍼스 함인섭광장에서 '제9회 김치담그기 한미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김치담그기 행사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가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가 후원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담그기 체험을 통해 청정 강원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 교학부총장, 김명동 산학연구부총장을 비롯해 지역기관·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홍보관 및 판매관, 농산물비교전시관, 김치박물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이벤트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육동한 춘천시장, 한창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강원대 김

이번 행사 기간 김치담그기 체험 외에 이웃사랑을 위한 사랑의 김치 나눔, 허수야비 만들기 경연대회, 만원의 행복 농산물꾸러미 판매, 강원농특산품

김대중 강원대 교학부총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강원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이 널리 홍보되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동희기자 yulnyo@kwnews.co.kr

江原日報

2023 11 20 ()

03



감사 나선 교육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가 지난 17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2023 11 17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치원 특수교육 지도사 방학중 비근무’ 지적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 상시 전일제 근무의 필요성 제안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 방학중 비근무’ 지적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은 17일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의 방학중 비근무로 인한 특수유아의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유아는 특수교사, 장애유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유아의 학습보조, 신변처리, 급식지도, 등하교 등을 담당하며 특수유아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김용래 의원은 “유아들은 교사와의 라포형성과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특수유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특수교육지도사가 방학중 비근무 직종이라는 이유로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문제”며 “특수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려면 시간제 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특수유아의 돌봄 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2023 11 18 ()

세계타임즈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유치원 특수교육 지도사 방학중 비근무’ 지적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도의원(국민의힘, 강릉3)은 17일 교육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치원 특수교육지도사의 방학중 비근무로 인한 특수유아의 돌봄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유아는 특수교사, 장애유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의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한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유아의 학습보조, 신변처리, 급식지도, 등하교 등을 담당하며 특수유아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역할을 한다.

김용래 의원은 “유아들은 교사와의 라포형성과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특수유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특수교육지도사가 방학중 비근무 직종이라는 이유로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일은 문제”라며 “특수유아를 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려면 시간제 인력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 특수유아의 돌봄 환경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 11 18 ()

에너지경제

엄기회 도의원 "농어촌 유학제도, 소규모 학교 살릴 효과적 대안"

박에스더 ess003@ekn.kr



▲엄기회 도의원(철원 2)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 학교 살기기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가 제기됐다.

지난 17일 엄기회 도의원(철원2)은 인구소멸 지역 학교의 존폐 문제 해결방법으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농어촌 유학제도는 가족 체류형과 센터형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족 체류형 유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센터형은 각 지자체가 부모 역할을 통해 보호와 거주를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각 지역의 팬션 등 개량으로 거주 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 의원의 도 교육청 차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 도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는 각 지자체 등과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엄기회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 농어촌 학교 유학은 9월 기준 영월·홍천·춘천·인제 등 4개 교육지청원의 6개 학교가 신청해 3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고 철원군이 1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엄 의원은 "농어촌 유학제도가 소규모 학교를 살릴 가장 효과적이며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대도시 지역에서 강원도로 유학 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ess003@ekn.kr

2023 11 17 ()

스포츠서울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농어촌 유학제도 , 소규모 학교 살리기 위한 유일한 희망”

수도권 등 대도시 지자체 · 교육청과 업무협약 등에 나서야
(학교 및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적극적 개발로 활성화 필요)



엄기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작은학교 살리기의 효과적 정책수단으로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철원2)은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구소멸 지역 학교의 존폐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대도시 지역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엄의원은 제도 운영의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가족 체류형과 센터형의 두 가지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옥녀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가족 체류형 유학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형태이며, 센터형은 각 지자체가 부모 역할을 통해 보호와 거주를 지원하는 형태”라고 답변했다.

거주환경에 대한 질문에 박 정책국장은 “각 지역의 팬션 등의 개량을 통해 거주지원을 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의원은 “철원군의 경우 농어촌 유학 지원 조례 제정 등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 도교육청 차원의 활성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묻고, 특히, 現도교육청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실장 출신인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업무협약 등의 활성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은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정책국장은 “현재까지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등과 직접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엄기호 의원은 “농어촌 유학제도가 소규모 학교를 살릴 가장 효과적이며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대도시 지역에서 강원도로 유학 온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제도의 성공과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엄기호 의원은 강원도교육청 농어촌 학교 유학은 2023년 9월 기준으로 영월, 홍천, 춘천, 인제 등 4개 교육지원청의 6개 학교가 신청하여 33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철원군의 경우 4개 학교가 추가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dck4021@sportsseoul.com

33

2023 11 17 ()

G1방송

김기하 의원, 도교육청 홍보 영상물 업체 선정 지적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추진한 브랜드 홍보 영상물의 업체 선정과 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기하 도의원은 오늘(17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은 교육청 출범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광고 제작에 수의계약으로 5,500만 원의 예산을 썼다"며,

"업체 선정 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여러 기술적인 이유로 도내 업체 선정이 불발 돼, 외부 지역 업체를 선정했다"며 "비용 대비 충분한 수준의 결과를 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간투데이

2023 11 20 ()

14

강원특별자치도 김기하 의원 “교육청 홍보영상 업체 선정 보다 투명하고 체계화해야”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지난 17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브랜드 홍보 영상물의 업체 선정과 예산 규모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동해 2)은 1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교육청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홍보하기 위한 브랜드 광고 제작에 수의계약을 통한 5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업체 선정과정이 체계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쳤는지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상혁 강원자치도교육청 공보담당관은 “해당 동영상은 방송사 광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선정 과정에서 여러 기술적인 이유로 도내 업체 선정이 불발된 것으로 영상 제작 수준 등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외부 지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다.

김기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수의계약의 적법성이 보장되었다고는 하나, 교육청이 제작한 타 홍보영상들과 비교해 제작 단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업체의 전문성 등은 어떻게 평가했는지 재차 질문했다.

이에 김 공보담당관은 공보담당관실은 “도교



육청 홍보업무를 위해 광고 업무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구성원간의 많은 고민을 통해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방송사 광고영상의 경우 해당 예산은 사실상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면서 “외부에서 평가할 때 영상의 품질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비용대비 충분한 수준의 결과를 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보담당관실의 자체 판단은 존중하나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업체 선정 등에 보다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도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하 의원에게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 준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이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전실적의 제출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이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업체선정의 문제가 의회의 동의나 보고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유사 사례들에 대해 적극적인 확인 작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江原日報

“전자철관 사업 의혹 감사원 조사 예의주시”

강원자치도의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뜨거운 감사
농어촌 유학제도 활성화·홍보영상 선정 투명성 등 지적

속보=강원자치도교육청의 전자철관 사업이 논란(본보 10월27일자 인터넷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예산 원칙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강원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다만 교육위원회는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하지 않고 감사원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진(비례) 의원은 “(전자철관 예산을) 당초 교육위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심의했는데, 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변경해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

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전봉주 교육청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고, 정오현 감사관은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승진 의원은 “전자철관 사업과 관련해 사전 담합 의심, 수요조사 부실,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교육청은 도 감사위에 청구하든 자체 감사를 하든 의혹을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조성운(삼척) 의원 역시 교육위 차

원에서 도 감사위에 감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견 조율 후 박길선 교육위원장은 “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성운 의원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엄기호(철원) 의원은 농어촌 유학제도가 소규모 학교를 살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활성화를 주문했고, 김기하(동해) 의원은 교육청 홍보영상 업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이날 32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강원도민일보

‘전자철관 업체 특혜 의혹’ 도감사위 감사청구 유보

도의회 교육위, 감사원 조사결과 주목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철관 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자체조사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지난 17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전자철관 업체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한 의회 내외부의 강원도 감사위원회 회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이승진(비례) 의원은 “전자철관 사업은 사전 담합이 의심되는 대목, 예산 사용 원칙을 위반한 부분, 수요조사가 부실하다는 불만, 담당부서가 배제되는 비합리적인 사결정 과정,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한 의혹 등 신뢰가 깨져있는 상황”이라고



이승진 조성운

지적했다. 조성운(삼척) 의원은 회의에서 도 감사위 회부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위는 비공개 내부 회의를 열고, 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길선 교육위원장은 이 같은 결정을 공표하며 “감사위 감사 청구 여부는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성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해야 한다”며 질의 중단을 선언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철화

2023 11 17 ()

KBS 춘천

강원도의회 교육위 '감사요청 미수용'...“의회가 묵인” 비판

앵커

전자철판 보급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감사위원회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여부를 지켜보라며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까지도 전자철판 사업을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새로 나왔습니다.

전자철판 사업예산의 목, 즉, 용도가 '공립 학교' 용인데 이를 사립유치원에 배정했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의 9%인 14억 원입니다.

[이승진/강원도의원 : "158억 원 예산 심의 당시에 '620-04' 공립학교 세목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면 사립 유치원을 포함하는 게 맞습니까?"]

[전봉주/강원도교육청 행정국장 : "세 자리 이후의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 사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정책협력관실의 개입으로 전자철판 구입 '권장' 조건이 생기면서 '특혜' 조건이 됐다는 의혹도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성운/강원도의원 : "감사할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전자철판 건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감사 개시 여부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박길선/강원도의회 교육위원장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여부 등은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고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의회가 혈세 낭비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나철성/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이런 특혜와 상식이 무너진 대표적인 강원교육의 사례이기 때문에 즉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취재결과 이달 초, 교육부도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 사업 서류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yjkim1@kbs.co.kr

2023 11 17 ()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되었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춘천, 사진)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하였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여,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김진영 기자

2023 11 17 ()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 관련, 감사 촉구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이승진 의원, '전자철판 사업 관련 예산 원칙 위반' 지적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전자철판 보급 사업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승진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에서 "전자철판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 620이 맞는지와 세목 중 공립과 사립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해당 예산과목은 학교회계전출금이며 공립은 620-04이고 사립은 620-10이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공립이 04이면, 공립에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며 "당초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 시 공립에만 적용되도록 04로 심의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해, 사립을 포함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으로 감사 대상이다"며 "검토없이 감사를 조속히 착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전에 교육감에게 예산 전용 관련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달한 바 있는지" 물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서 세목은 부서장 책임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별도로 교육감님에게 보고하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관도 "해당 내용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은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승진 의원은 "감사실이 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도 감사위원회가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교육감이 해당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이며 만약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철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라면 교육감의 직무유기"고 질타했다.

또한 "교육감이 앞으로 올바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승진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교육위원회에서 전자철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공정성과 적절성, 사전담합 의심, 도교육청의 수요조사 관련 준비성 미흡,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며 "전자철판 사업은 이미 신뢰가 깨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내년에도 155억이 투입되는 이 사업에, 도교육청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며 "문제가 시급하고 심각하니, 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고 해당 의혹을 조속하게 해소하라"고 주문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2023 11 18 ()

세계타임즈

조성운 의원,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시 특정 업체 쓸림 의혹' 및 '전자철판 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 감



[강원도 세계타임즈=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업체들의 쓸림 의혹 제기와 전자철판 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제안했다.

조성운 의원(사진)은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도교육청 납품현황 자료 제시를 통해, “한 업체가 전체 사업의 2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까지 포함했을 경우, 총 5개의 특정 업체가 사업의 70%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업체의 쓸림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허 공법 적용 시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특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공법 적용 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특허는 주로 학교 외장공사에 해당된다”며 “외장공사에 꼭 필요한 특허이고,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5개의 특정 업체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 회사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의원은 14일 전자철판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내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과 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장 및 감사관 전원이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조성운 의원은 “이번 전자철판 구매 건에 대해 도교육청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 11 17 ()

스포츠서울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시 특정 업체 쓸림 의혹’ 및 ‘전자철판 사업 관련 도



조성운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은 17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설계 반영 업체들의 쓸림 의혹 제기와 전자철판 사업 관련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뢰를 제안했다.

조성운 의원(사진)은 최근 3년간 특허 관련 도교육청 납품현황 자료 제시를 통해, “한 업체가 전체 사업의 25%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4개 업체까지 포함했을 경우, 총 5개의 특정 업체가 사업의 70%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정 업체의 쓸림이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특허 공법 적용 시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특허 공법을 적용하는 사유에는 “해당 특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공법 적용 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경우”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문제가 제기된 특허는 주로 학교 외장공사에 해당된다”며 “외장공사에 꼭 필요한 특허이고, 예산 절감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5개의 특정 업체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통해, 한 회사가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14일 전자철판 관련하여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내부에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과 도 감사위원회에 직접 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장 및 감사관 전원이 의사가 없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끝으로 조성운 의원은 “이번 전자철판 구매 건에 대해 도교육청의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해 달라”고 촉구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2023 11 18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장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10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지적된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10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강원도의회에 제출한 출자·출연기관장 법인카드 감사내용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강릉·삼척·속초·원주의료원과 강원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장의 법인카드가 잘못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성은



2023 11 17 ()

강원평경연 “전자칠판 사업 감사위원회가 감사해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어제(16일),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자칠판 보급 사업 계획 변경과 제품 조건 추가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진실 규명을 위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3 11 17 ()

KBS 춘천

“강원도 출연기관 감사 강화해야” 지적 잇따라

앵커

어제(16일)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혈세가 들어간 강원도 출연기관과 민간기업 지원 사업비 내역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행정사무감사 시작부터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이어집니다.

올해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발행된 책에 현진권 원장 등 2명의 이름만 편저자로 표시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류인출/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강원연구원 예산으로 책을 만들었지만, 개인이 낸 것처럼 해야 많이 읽힐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강원연구원장이) 답변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올해, 강원연구원장의 업무추진비가 한 해 전보다 3배 늘었고, 국외 출장도 늘었다며 연구원 운영 전반을 점검하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 "의원님들이 제기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한다, 안 한다'를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강원도가 혈세를 지원한 그린수소 생산사업에 대한 부실한 관리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관리가 서류 위주로만 이뤄졌다면, 현지 실사와 현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그린수소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연구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주/강원도 감사위원장 : "R&D 사업이라든지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도의원들은 의료원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등 강원도 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박성은

우리 농업의 답은 직불금이다

의정칼럼

최종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우리나라는 국가의 기틀이 처음으로 잡힌 고조선 시절부터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며 농업을 제일 중요시했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1의 산업은 단연 농업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 근대화를 거치면서 산업화로 인해 농업 비중이 점차 줄었다. 정부는 이 중 곡가제 등 농업 보호정책으로 산업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으나,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른 쌀시장의 전면 개방 이후, 우리 농업의 경쟁력 약화가 본격적으로 야기됐다.

정부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으나, 늘 소비자 보호정책과 맞물렸다. 국민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의 희생양은 먹거리인 농업이었기에 농가의 재산성은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2021년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공인받았으며,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에서 세계 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했다. 이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은 우리 농업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과 반대로 농업은 농민들의 희생과 함께 더욱 약화돼 가고 있다. 농가의 부채 또한 2017년도 2638만원에서 2021년에는 3659만원으로 5년 사이에 대폭 급증했다. 그렇기에 이제는 농업인들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농업의 공익성을 판단해 농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돼야 할 때다.

그 첫 시작이 바로 직불금 확대다. 2020년 공익직불금의 첫 시행 이후, 소농 및 고령 농가들의 소득이 다소 안정됐으며, 이전의 직불금에 비해 지급 금액의 확대와 지급 구분에 따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다. 직불금 비율은 선진국에 비교해 턱없이 낮고, 직불금 수령이 아직도 농사만 짓는 농민이 쉽게 받을 수 없는 구조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1996년도부터 시행된 농지취득자격제도는 본인이 땅을 경작하지 않으면 공시지가 또는 감평가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더불어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또한 임대차계약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대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자면 임대차계

약서에 의거, 농업경영체 필지로 등록해야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

그렇기에 정부나 국회에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위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 만큼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율 4.9%를 선진국 수준으로(30~80%) 대폭 확대해 농업경영체 산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현 정부의 공약이던 직불금 대폭 증액으로 5조원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결국 직불금 같은 탄탄한 사회안전망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바뀐 농업의 밝은 미래를 이루는 밑바탕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 자부한다.

농업직불제는 유럽처럼 청년이대를 이어받고 농촌을 떠나지 않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결국 농가소득 안정을 바탕으로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고령화를 탈피하고 청년들이 있는 미래가 있는 농촌,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모든 도민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린다. 필자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역할과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16



김진하(왼쪽) 양양군수·진종호(양양) 도의원은 20일 오후 2시 오색하부정류장에서 열리는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11



박호균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초항 국제크루

즈터미널에서 열리는 속초항 국제카페리북방향로 취항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14



최종수(평창)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초항국

제크루즈터미널에서 열리는 속초항 국제카페리북방향로 취항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16



이병선(위 왼쪽) 속초시장·김시성(속초·위 오른쪽)·강정호(" · 아래 왼쪽)·원미희(비례)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속초항국제 크루즈터미널에서 열리는 시승력 60주년 기념 속초항북방향로 취항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16

연어 비전선포식에 참석한다.



오세만(왼쪽) 양양군 의장·김용복(고성) 도의회농림수산위원장은 20일 오후 3시 30분 남대천수변공원에서 열리는 강원형 K-

江原日報

민원서류 발급될까... 불안감 여전한 월요일

01

사상 초유 행정전산망 '먹통'

지난 17일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울행정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면서 민원서류 발급이 사흘째 중단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원서류 발급이 울스톱된 지 사흘 만인 19일 정부가 "시스템을 완전 복구했다"고 발표했다지만 혼선을 겪은 국민들은 20일 행정업무 재개와 함께 정상화가 가능한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원활한 처리 여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8시40분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인한 전산망 장애가 발생, 정부 행정

행안부 정상화 발표 불구

오늘 업무 재개 여부 촉각

지난주 금융 처리 등 차질

시민들 당국 성토 줄이어

전산망 '새울행정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를 가동, 공무원과 민간업체를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 18일 오전 '정부24'를 임시 재개한 데 이어 '새울행정시스템'도 복구, 20일부터 정상 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원자치도민들은 새울시스템 장애로 극심한 불편을 겪었고,

오류가 발생한 지 사흘째 되어서야 복구가 이뤄진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주말 이사를 앞두고 17일 확정일자 받기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던 최모(45·원주시 무실동)씨는 "전세금 피해사례가 많아 이사 직전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전입 신고를 하러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는데 전산이 먹통이 돼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디지털 강국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20일에는 처리가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김모(29·춘천시 근화동)씨는 "이사를 앞두고 17일 주택도시보증금 전세 대출 사전 심사를 진행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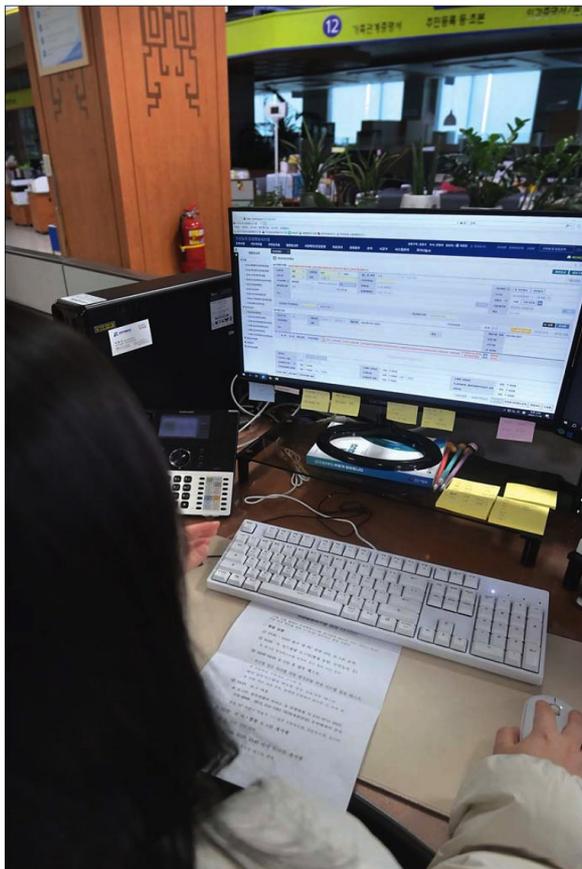
만 정부24 이용이 불가능해 결국 심사를 받지 못했다"며 "주말까지 마치기로 했던 부동산 업무를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답답할 따름"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를 찾아 새울 시스템 접속 여부 등을 확인하며 "20일 주민들이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밀린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도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대비해 계속해서 상황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겸·이무현·이규호기자

江原日報

01



휴일에도 출근해 전산망 점검하는 공무원 지난 17일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가운데 휴일인 19일 도내 한 지자체 민원실에서 직원이 민원서비스 가동을 점검하고 있다. 권태명기자

江原日報

‘규제 프리’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전 점화

속보=국내 첫 ‘글로벌 혁신 특구’ 지정 절차가 확정되면서 전국 광역시·도 간 본격적인 유치 경쟁(본보 10월19일자 1면 보도)이 시작됐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최초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모든 규제를 걷어내는’ 규제 프리지역으로 강원자치도는 바이오산업을 무기로 국내 첫 지정을 노리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강원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글로벌 혁신 특구 선정 일정을 통보했다.

11월 한 달간은 전국 후보사업에 대한 서면평가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현재 평가위원 위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면평가를

강원자치도 보건의료 데이터 특구 국내 첫 지정 도전장 중기부 내달 최종 선정... 지정 시 총 5년간 860억 투자

통과한 광역지자체의 후보사업은 12월 초 발표평가의 기회를 얻게 된다. 최종 선정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12월 초·중순이 유력하다.

중기부는 최종 선정 및 발표 시기를 ‘국회 예산 확정 직후’로 못 박았다. 당초 2개 광역시·도를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중기부는 2곳 이상의 확대 지정까지 검토 중이다.

강원자치도의 콘텐츠는 춘천과 원주 등을 중심으로 한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이다.

디지털헬스케어와 정밀의료 규제자유특구 성과 및 보건의료 데이터의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국제 비즈니스 시장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860억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바이오·디지털헬스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내년 10개 보건의료 데이터 기업 유치, 신규 고용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강원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계획과 효과, 필요성 등을 직접 어필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4일 독일을 방문해 글로벌 인증기관인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V Rheinland)와 글로벌 혁신 특구 시너지 효과를 위한 ‘규제과학클러스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광열 부지사는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러한 협력체계는 강원자치도가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과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의혹·소송·지연...경제자유구역 ‘첩첩산중’

efez 위기의 동해안경제자유구역

① 각종 소송과 논란 휘말린 동자청 망상1지구 사업자 공고 의혹

10년간 담보상태에 빠져있는 경제자유구역 동해망상지구 개발사업을 놓고 최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전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무효 확인 소송, 실시계획·착공 지연 등 ‘트리플 악재’가 나타나고 있다.

19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 기관과 관련 업체에 대한 본지 취재 결과, 망상1지구는 전임 도정에 이어 또 다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동자청의 대체사업시행자 공모 공고에 대해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실행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동자청 관계자는 “경자사업에 건설한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해 참여 의향이 있는 업체들과 컨택하는 것은 동자청의 고유 업무”라며 “참여업체 평가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의혹을 제기하면 투자유치 업무는 물론, 사업 추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망상1지구 전 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는 지난 17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동자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동해이씨티는 소장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은

망상1지구 사업자 공고 의혹 동자청 “업체 컨택 고유 업무” 전 시행자 취소처분 소송 제기 2지구 미승인 3지구 부지 난항

강원도지사 권한인데, 동자청에 의해 취소처분된 것은 명백한 하자로 무효”라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은 적법하게 신청한 실시계획을 부당하게 도·시가 승인을 보류해 발생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한 지정 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송 가져분이 인용될 경우 현재 공고 중인 대체사업자 모집이 중단될 뿐 아니라 이는 2·3지구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2024년 12월 만료되는 전체 망상지구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투명해지게 된다.

망상2·3지구 실시계획·착공 역시 지연되고 있다. 망상2지구는 올해초 실시계획을 마치고 올해안에 공공시설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도의 승인이 보류됐고, 2022년 12월 실시계획이 승인된 망상3지구는 올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이 늦어지면서 동자청과 시행자 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전인수 jintru@kado.net



◇원주시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식이 지난 17일 호텔인터블고 원주에서 원강수 원주시장, 이재용 원주시의장, 황병관 강원자치도 빅데이터산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혁신도시에 8천억 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도·시·3개 기업 투자협약... 내년 상반기 착공 2027년 운영 목표

강원원주혁신도시에 8,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선진씨

씨에스(주), 휴림그룹, 메리츠증권(주)은 지난 17일 호텔 인터블고 원주에서 혁신도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기업은 혁신도시 내 8,0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조성, 원주시 IT 산업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 플랫폼 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신축 데이터센터는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데이터센터가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혁신도시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는 옛지 AI 반도체 기술을 접목, 고

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최적화와 분산 처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 등의 기대효과도 예상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원주시가 IT 중심 산업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관 휴림그룹 대표이사는 “휴림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로봇·5G 기술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데이터센터를 원주시에 구축해 해외수출을 위한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다. 원주=김설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02

60조 세계시장 개척 '강원형 K-연어산업' 닷 올렸다

양양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내년 봄 착공·2025년 출하 예정

동원산업 합작사 산업 추진 주도

동원그룹은 '강원형 K연어산업'을 발판으로 아시아 최대 연어양식산업 비전을 다시 품었다. 20일 양양 현지에서 열리는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이 공식적인 첫 출발점이다.

이날 비전선포식에 김재철 명예회장이 참석한다. 김 회장은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자로 통한다. 그는 1963년, 참치잡이 원양어선 선장(당시 27세)이 되면서 '캡틴 김'으로 광명대해를 누볐다. 거친 바다에서 항해하며 경영을 배

운 경험으로 육지에서 사업을 일궈냈다. 김 회장은 1969년 동원산업을 설립한 1세대 기업가다.

'강원형 K연어산업'의 닷이 올랐다. 전 세계 대서양 연어 산업의 규모는 60조원. 세계 시장 개척을 향한 동원산업의 항해엔 강원도와 양양군이 함께한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대서양 연어 완전 양식에 성공, 연어 산업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양양에 구축되는 연어 육상 양식단지는 2024년 봄에 착공, 2025년 하반기에 국내산 대서양 연어를 출하할 예정이다.

강원형 K-연어 산업 추진엔 케이스마트양식㈜가 주도적으로 뛰어 들었다. 케이스마트양식㈜는 ㈜동원산업과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이 설립한 합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의 연어 양식 단지.

사진 제공=동원그룹

작회사로, 2025년까지 새면에블루션 양식기술과 시스템을 적용해 양양에 육

상 연어양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동원산업은 지난 2020년 7월, 약 65억 원을 투입해 새면에블루션 지분 약 10%를 확보하고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양식장에 접목하며 연어 산업 추진에 있어 독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다. 도와 케이스마트양식㈜는 지난 8월 노르웨이 새면에블루션에서 'K-연어 산업화 협력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 연어 시장 개척을 향한 동원

그룹의 새 비전은 다시, 바다에서 시작된다. 현재, 동원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남정 부회장은 김재철 창업회장의 차남으로, 김 회장이 2019년 퇴임 이후 그룹을 이끌고 있다. 창업주 김 회장은 1982년 국내 최초로 참치 낚 '동원참치'를 출시, '참치왕'으로 불렸다. 김 회장의 배턴을 이어받은 김남정 부회장 체제에서 '강원형 K연어산업'을 중심으로 한 '연어의 꿈'이 성공할 수 있을지,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지은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 19

겨울 관광 특수 견인해야

-홍보전, 콘텐츠 다양화 4계절 관광모색을

평창지역을 필두로 도내 스키장들이 이달 말부터 개장에 들어가면서 겨울 관광 시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2년째를 맞이하는 도내 겨울 축제도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도내 관광업계와 주민들은 올 겨울엔 여름 피서철 못지않은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 관광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4계절 관광을 견인하는 호재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천어와 눈 축제 등 겨울 행사는 도시인과 외국인들의 발길을 부르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시설과 안전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홍보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강원 겨울관광 홍보전'이 열려 호응을 얻었습니다. 동해안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과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도내 동해안 지역을 비롯한 강원 대표 겨울관광 콘텐츠를 소개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강릉·동해·삼척·속초시와 고성·양양군 등 도내 동해안 6개 시·군은 지역 대표 수산물을 홍보한 데 이어, 지역 관광 자원 및 축제 일정 등을 소개하는 관광홍보전을 병행해 '일석이조'의 홍보 효과를 거뒀습니다. 강릉은

'핫 플레이스10'을 주제로 지역 대표 먹거리와 볼거리를 자세히 설명했고, 동해와 삼척·속초 역시 주요 관광지별 교통편, 지역 유래 등이 정리된 홍보물을 배포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고성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즐길 수 있는 휴양테마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했고, 양양은 앱을 통한 관광지 예약 및 이벤트 참여 등을 통해 스마트 관광을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겨울 축제의 성지인 화천군도 이날 홍보전에 참여해 매년 1월 개최되는 산천어 축제와 산천어파크골프장, 비수구미 트레킹코스 등을 소개했습니다.

강원지역 축제와 스키장 등 겨울 관광지는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비슷한 콘텐츠로는 방문객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마련해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날씨 변수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겨울은 한파와 따뜻한 기온이 교차하는 '널뛰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과 얼음을 주요 테마로 하는 축제의 특성상 기후 관리는 비상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참가자들의 발길을 축제장에서도 심상권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을 마련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20 ()

/ 19

‘정부24’ 민원발급 마비 반복없도록

-일상 불편 손실 초래...전산망 완벽 복구 철저한 관리를

지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11월 17일 오전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 대국민서비스 ‘정부24’ 이용이 늦어지기 시작해 오후엔 전면 중단되면서 크고 작은 생활 불편과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자동차 계약 등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비롯해 다양한 민원 서류발급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주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만 하루가 지난 이튿날 오전에서야 ‘정부24’ 서비스가 임시 재개되긴 했으나, 시·군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을 찾아 민원을 처리하려던 시민들은 업무를 보지 못하면서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장애가 즉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에서 기다리며 애타게 태우다가 결국 허탕 치고 되돌아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 발생 초기엔 전산망 마비 원인이 접속자가 동시에 몰리면서 빚어진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고, 언제 복구될 지 그 시점이 분명치 못해 황당해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민간인 100여명을 투입해 대처한 결과 ‘정부

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데 이어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통해 정상화를 앞당기겠다는 설명입니다.

전국을 망라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는 행정업무 처리의 효과성을 개선하고, 국민 편리성을 향상하는 핵심적인 대민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와 유기적 연계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87년부터 행정전산망 사업에 착수한 이후 꾸준히 효율성을 높여와 사회적 비용 역시 절감했습니다.

반면 이번 사태와 같이 정보네트워크가 불안정할 경우 전면적으로 마비되는 사태를 부르고, 국민에게 끼치는 부정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 운영돼야 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 흐름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기에 보안체계에 허점을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중단 사태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겨선 안 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완벽한 운영과 함께 보안문제를 동시에 재점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11 20 ()

/ 19

폐광지 위기, 국회의원·지자체 공동 대처로 극복

강원일보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을 지난 16일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상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최종훈 삼척부시장, 이진식 국무총리 소속 시행산업통합감독위 사무처장, 정일섭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장, 양정식 산자부 석탄산업과장과 지역사회 단체 및 주민, 학술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무엇보다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주제로 힘을 모아 공동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가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또 폐광 지역 현안과 관련해 공

감대가 더욱 확대되고 폐광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대처를 거듭 확인했다는 점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폐광지역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지만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 이후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995년)’이 제정된 지 30년이 돼 가지만 아직도 침체의 늪에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소멸의 위기까지 맞고 있다. ‘폐특법’ 연장으로 특별법의 영구성을 갖기는 했지만 강원랜드 카지노리조트 등 지역경제 여건은 글로벌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이에 정부가 폐광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양한 대체산업 발굴에 앞장서야 하는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다. 폐광지역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 의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철규 국회의원은 “향후 10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대체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폐광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들을 풀어내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폐광지역 자생력 확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폐광지역의 현안 해결

2023 폐광지역 발전포럼 정선에서 개최

4개 시·군 공동 발전 전략 실천해 나가기로

지역 정치권과 공조, 현안 해결 추동력 되기를

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산자부와 강원자치도가 비축무연탄기금이 폐광지역 대체산업에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최명서 영월군수는 폐광지역 시·군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리조트로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최종훈 삼척부시장은 폐광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폐광 4개 시·군이 함께 협력하고 추진하는 사업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번 포럼에서 지역 정치권과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다짐한 공조가 폐광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에 새로운 추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江原日報

2023 11 20 ()

/ 19

지역축제, 계절적 한시성 극복해야 경쟁력 생겨

원주시가 '사계절 축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편시티(Fun City)' 조성에 발 벗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연중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는 30여 개로, 이 중 69%가 5월과 9~10월에 집중돼 있다. 이에 축제 현황 진단, 개최 시기 분산, 발전 방향 모색 등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1년 내내 도심 곳곳에서 볼 거리와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는 '편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자치단체, 지역 주민들이 경쟁적으로 벌이는 대부분의 축제가 '동네잔치'라는 비아냥을 듣는 실정에 비춰 보면 고무적이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아이스링크 운영,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연날리기 한마당을 열어 동계스포츠 체험 기회와 겨울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이어 봄에는 용수골 꽃양귀비축제, 장미축제, 원주 맨발 걷기 축제, 치악산트레일러닝대회 등 꽃을 주제로 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개최한다. 여름에는 문화의거리 치맥축제 등 야간형 행사와 치악산복숭아 축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국제 걷기 대회, 한지문화제, 만두축제, 댄싱카니발, 동화마을수목원 가을축제 등으로 분위기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계절별로 축제를 개최하되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즉, 매년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축제를 열기보다는 주

민 의견 수렴을 거쳐 과감한 폐지 또는 통합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자치단체에서 겨울축제에 투입하는 예산과 행정력, 주민의 성원을 감안하면 분명한 비전이 주어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근 시·군에서는 애드벌룬을 띄우는데 손 놓고 있으면 원성을 들을까 봐 어설픈 축제를 치르기 일쑤다. 겨울 풍경을 내세워 동네잔치 벌이듯 하는 이벤트에 자치단체가 휩쓸리는 것은 축제의 식견을 의심케 할 뿐이다.

축제인 만큼 날씨에 좌우되지 않아야 지속 가능한 겨울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겨울 정취 즐길 거리는 도처에 널려 있다. 특화된 축제, 어떻게 해야 지역경제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에 관해 냉정하게 성찰할 것을 주문한다. 이제는 지역축제가 하나의 산업이어야 한다. 단순한 즐길 거리, 놀이관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정서·환경에 품격 있는 콘텐츠를 접목해야 매료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을 특화한 테마, 사계절 생산력이 발휘되는 축제로 이끌어야 하는 과제다. 외부 참여 없이 주민끼리 상부상조하는 식의 축제 운영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축제를 통해 지역의 상경기도 살리고 지역만의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